"공무원 노조 활동 이유 파면·해임은 가혹"

전공노 첫 복직 판결

순천시 공무원 7명 승소…단체장 인사권 제동

법원이 24일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순천시 공무원 7명을 파면·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들 공무원이 전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공노 사태와 관련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복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공노가 이미 합법화됐다는 점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4일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래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공무를 수행했고, 공무원의 근로자적 측면에서 권익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집단행위를 하게 됐으며 현재 전공노 순천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했다"며 "이 점들을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법노조로 전환되기 이전의 공무원노조 활동은 불법이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했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재량권을 일탈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의 집단행위 당시 전공노 순천지부는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상 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근로 3권의 주체라 할 수 없어 분명한 불법단체였고 집단행위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이씨 등은 이에 반발, 이듬해 초 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순천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등 절차를 거쳐 이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은 해임했으며 이들 7명은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파면·해임된 후 노관규 순천시장이 가는 곳 마다 따라 다니며 규탄 시위를 하는 이른바 '그림자 시위'를 벌이면서 노 시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노조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지난해 전공노 합법화 이전까진 지자체 손들어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법외노조로 활동하다 지난해 합법화됐으나 지난 2004년 총파업과 2006년 정부의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간부들이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순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10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6명은 파면·해임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총파업과 관련 동구 전공노 간부 1명이 파면됐고, 서구에서도 1명이 해임되는 등 2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이들은 모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거나 재판 도중 취하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전공노 총파업과 2006년 전공노 노조 사무실에 대한 지자체의 폐쇄과정에서 4명이 파면·해임됐고 16명은 정직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74명에게는 감봉, 12명은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광양과 장흥, 해남 등 3개 지자체의 전공노 간부 3명은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으며, 이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파면 결정이 옳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무안군 전공노 노조 간부 1명도 같은 이유로 해임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끝에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4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행정 구제 절차와 재판을 거쳤으나 당시는 전공노가 불법단체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모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억대 뇌물' 광주 전산센터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 업체에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권을 주고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광주센터(2센터)장 손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04~2006년 H사가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뒤 6차례에 걸쳐 H사 대표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승용차 안에서만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지인의 김모(53)씨의 계좌에 맡겨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옥중 결혼 아내 위한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남구청장에 보내 영구임대주택 배려

지난 2월 26일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발신인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인 K(56)씨. 편지는 A4용지 4장 분량에 달했다.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 A(56)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라는 사연이 담겨있었다.

또 K씨는 '교도소에서 반 평생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저를 위해 지난해 교도소까지 찾아와 혼인신고를 해준 아내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어갔다.

K씨는 청송교도소에서 직업 숙련 훈련을 받으며, '미장 2급 자격증'과 '건축도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09년 6월 출소할 예정이다.

편지를 받은 남구청은 난감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규를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나서 조사한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남구청은 A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간혹 교도소에서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내오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방역 이렇게 하세요" 24일 광주시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2008 하계방역 발대식'에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휴대용 연막기를 들고 방역 소독 시범을 보이고 있다. 각 동(洞) 주민 30명으로 구성된 방역 요원은 내달 21일부터 집중 방역활동을 펼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묻지마 살인' 시도 30대 7년 선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속칭 '묻지마 살인'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유없이 길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33·노동)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의 목을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해 정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배우 최민수, 대낮 70대 노인 폭행

영화배우 최민수(46·사진)씨가 70대 노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명 소방서 사거리에서 이 동네 주민 유모(73·식당운영)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과 함께 유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당시 검은색 지프형 승용차를 타고 이 곳을 지나던 최씨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견인차 때문에 길이 막히자 견인차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본 유씨가 "젊은 사람이 욕을 왜 하냐"고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유씨는 이어 지붕이 없는 최씨의 지프 앞유리를 잡고 조수석으로 올라 탄 뒤 차를 멈추려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자 최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내리라"고 위협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4일 유씨 가게를 찾아와 "고의가 아니었다. 미안하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지만 뒤늦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 가족은 사과를 받지 않은 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채팅서 만난 여자친구 집 절도 행각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친구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강모(28)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여자친구 박모(28)씨의 집에서 현금 11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강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업체에서 확인 전화를 거는 바람에 그간의 범행이 들통났는데, 고소를 당한 강씨는 "피해금액을 물어 주겠다"며 박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또 다시 범행.

○…경찰은 강씨가 박씨의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장면이 찍힌 은행 CCTV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한 끝에 강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